

# 나경원, 정부 향해 막말... 국회 '아수라장'

### 한국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정은 수석대변인·헌정 농단" 민주당 "국가 원수 모독 윤리위 제소" 강력 반발...정국 급랭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며 정부-여당과의 한판 대결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그동안 한국당이 지적해 온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거론, "이 나라가 무모하고 무책임한 좌파정권에 의해 쓰러져가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헌정 농단' 경제 정책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부의 인위적 개입과 재분배 정책이 고용소크, 분배소크, 소득소크로 이어지는 등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자명한 데도 정부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없이 '세금 퍼주기'로 경제 실정을 가리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다.

이어 안보 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가짜 비핵화'로 얻은 것은 한미훈련 중단 뿐"이라며 정부의 '비핵화 플랜'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거론하며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면서 한미 간 엇박자가 심해지고 있고 한미 동맹이 균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민생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탈원전, 4대강 보 철거가 문재인정부가 좌파 포로정권이라는 명백한 근거", "강성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며 노동개혁은 시작도 못했고, 촛불 정국에서 휘둘리는 심부름센터로 전락했다"라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의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장관 후보자들의 줄임명 등을 조목

조목 거론했다. 특히, 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공조에 나서고 있는 선거제 개편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 부정"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 폐지하는 한국당 안을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나 원내대표는 '대안정당' 면모를 부각하는 데에도 공을 들였다. 경제 분야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초래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경제부처와 여야 정당들로 구성된 '초당적 원탁회의' 개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무분별한 공시지가 인상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막기 위한 '국민부담 경감 3법'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방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남북갈등을 막고 대북 정책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대통령과 각 원내교섭단체의 대표, 원내대표로 구성된 '국론통일을 위한 7자 회담'을 하자고 했다. 한국당이 직접 '대북특사'를 파견해 김정은 정권에 '진짜 비핵화'에 나서면 획기적인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끝으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전 상임위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자고 했고,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 특검 도입과 국민투쟁까지 3단계 투쟁을 펼쳐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의 제안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말을 듣지 않게 해 달라"는 발언에 따른 민주당의 반발 등 강력한 후폭풍에 몰린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막말 언제까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중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뒷줄 가운데)가 단상으로 나가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개특위 위원장에 민주 4선 이상민 4차산업특위 위원장 바른미래 정병국 선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내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의원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으로 공석이 될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직을 당내 4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에 맡기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당 지도부가 이 의원에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이 의원이 수락했다"며 "사법개혁을 이끌 당내 중진으로 이 의원이 적임자라는 게 중론"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여당 시절이던 지난 17대 국회 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아 사법개혁합의를 이끌었다. 19대 국회에서

는 법사위원장을 지냈다. 사개특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 박영선 의원의 사보임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출됐다. 전체회의에서는 사개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을 이장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건도 처리된다. 한편,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5선의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기존 4차산업혁명특별위 위원장이었던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옮긴 데 따른 것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정의당, 의원 세비 인상분 전액 반납

### 5명 1인당 年 182만원

정의당 소속 의원 5명은 12일 오후 세비 인상분 전액을 국회에 반납했다.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의당 의원들을 대표해 국회 사무총장에게 국고 세입조치 신청서를 제출했다. 세비 인상은 1인당 연간 182만2820원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도 올해 세비 인상분을 기부 등을 통해 반납하거나 반납하기로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세비 반납에 대해 "의원의 세비 세비 인상을 막기 위해 정의당 의원들이 먼저 하는 실천이자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 결의로 좀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며 "정의당뿐 아니라 모든 의원이 동참해주시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개혁을 위한 정의당의 노력은 자발적인 실천에서 시작해 국회 의원 셀프 방지 3법 처리를 통한 제도화

로 이어갈 것"이라며 3법의 3월 임시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의 셀프 급여 인상, 셀프 해외 출장, 셀프 징계 심사를 금지하는 '셀프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의당은 국회의원 세비를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보수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셀프 급여 인상 방지법',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절반을 시민으로 구성하는 '셀프 징계 심사 방지법', 국회의원 해외 출장 심사를 의회 외교활동 심사위원회에 맡기는 '셀프 해외 출장 방지법' 등을 추진키로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의원 5명 전원과 함께 민주당 김상희·이상호 의원,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천정배 의원,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 민중당 김준호 의원 등도 참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바른미래, 선거제 패스트트랙 놓고 내분

### 옛 바른정당 의원들 완전한 연동형 주장... 개혁법 연계도 반대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또다시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등 야 4당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선거제 개혁안과 개혁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일부 의원이 강하게 반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과거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대거 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 잠

복해 있는 정체성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 및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나, 내부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바른정당 출신인 정병국 의원은 의총에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편안은 반쪽짜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 배분 선거제도)에 불과하다"며 "누더기 선거법을 쟁취하기 위해 우리 당이 그렇게

싸워왔나 싶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도 아니고, 원칙도 없는 이런 안을 정부-여당의 술수에 넘어가 다른 법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에 올려서는 안 된다"며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기본 원칙 고수를 주장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도 전면적 연동형 비례제도가 아닌 민주당이 제시한 부분적 연동형 비례제 수용 여부를 두고 반대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민 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사이) 다소 간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지

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후에 의총을 통해 당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출신인 권은희 정책위의장도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아닌 선거제 개혁안을 합의하는 국회 운영방식에 위반해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나아가 선거제 개혁법안과 개혁법안을 연계하는 데 대한 거부감도 감지됐다. 의명을 요구한 바른정당 출신 한 의원은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 9개를 선거법과 바꿔 치기하는 게 아닌가"라며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LPG 차, 일반인도 구매 허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일반인들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여야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미세먼지 대책 법안 중 하나다. 개정안은 자동차의 LPG 연료 사용을 전면 폐지하도록 해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되었던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

을 담았다. 미세먼지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 차량에 대한 소비를 권장하는 차원이다. 이언주 소위원장은 소위 종료 후 "미세먼지를 완화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그동안의 규제 진입장벽을 전면적으로 풀어서 시장에 맡기고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LPG도 화석연료의 일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수소 하이브리드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371280 point  
462810973 point  
576214302 point  
691749802 point  
874114002 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